

## 서천군 판교면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장소성 연구계획

인문지리학전공 석사과정  
박제욱

1. 연구 목적
2. 문제 제기

### 1. 연구 목적

최근 '문화재(cultural property)'라는 용어가 '국가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공식 개편된 것은, 국가유산 관리체계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전환을 반영하는 제도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국가가 보전·관리해야 하는 유산의 범주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근현대유산 전반으로 확장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재화적·물질적 성격에 국한되던 기존 '문화재' 개념을 탈피하여, 동·식물을 포함하는 천연기념물, 공동체의 기술 및 실전을 포괄하는 무형유산, 근현대 사회의 산업·도시·생활환경을 반영하는 근현대문화유산까지 포함하는 범용적·포괄적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유산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 자연유산 위원회의 신규 설치, 세부 분류체계 확립 등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보전 정책 구조 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정책적 확장 속에서 대중과 학계가 특히 주목한 영역은 근대 이후 형성된 근현대문화유산이다. 『근현대유산법』에 따르면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간 범주 속에서 형성된 건조물·공간·기술·문화적 흔적을 포괄한다. 이는 한국 사회가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겪으며 축적한 생활·산업·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사회적 가치가 동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근현대유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시기는 대체로 2000년대 전후로 파악되며, 보존의 관점과 활용의 관점이 병존한다. 우선 보존의 측면에서, 20세기 전후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산업합리화·생활양식 변화·기술환경 전환 등)는 많은 근현대유산을 철거·재개발 등의 압력에 노출시켰고, 이에 따라 "사라지는 유산"으로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1)</sup>. 반면 활용의 측면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시행 이후 각 지역이 정체성 확립 및 지역 브랜드화, 도시재생,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근현대유산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sup>2)</sup>. 즉 근현대유산은 '보존해야 할 유산'이자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며, 지방정부의 문화정책·도시전략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흐름 속에서 2001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대상 가운데

1) 문화재청, 1999,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방안 조사연구 보고서」.

2) 문예은, 2011,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지방문화』 14.

데 건설·제작·형성 후 50년 이상 경과한 유산을 등록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었다<sup>3)</sup>. 이는 기존의 강한 규제 기반의 지정문화재와 달리, 상대적으로 유연한 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훼손 방지와 활용 증진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시도였다.

지정유산은 관련 법률<sup>4)</sup>에 따라 원형 유지가 절대 원칙으로 규정되며, 각종 행위 제한·보존규제 조항<sup>5)</sup>이 넓게 적용된다. 반면 등록유산은 관련 법률<sup>6)</sup>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적극적 활용을 전제한 특례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산업유산 활용·관광개발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근현대문화유산 관리체계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선(線)·면(面) 단위 등록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의 문화유산 상당수가 개별 대상물 중심, 즉 ‘점 단위’ 관리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근현대유산은 거리·구역·항만·산업지대 등 연속적인 유산군(heritage assemblage)을 하나의 관리 단위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단일 유산을 넘어 역사적 도시경관 관점과도 연결되며, 근대도시 형성과 산업화 구조의 총체적 보존·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학술적 의의가 크다. 물론 전통 유산 중에도 절터(寺址)·가마터(窯址) 등이 포함되는 사적, 예로부터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경승지(景勝地)를 지정하는 명승 등 면 단위 지정 사례가 존재하지만, 근현대유산에서의 선·면 단위 지정은 하나의 공간과 개별문화재를 연계하여 유산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확장된다.

선·면 단위 등록은 2018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지정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24년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을 포함하여 총 9개 지역이 등록되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신규 선·면 단위 등록보다는 이미 지정된 아홉 지역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의 선도 모델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산 지정의 확대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보존·관리·활성화 모델 구축, 지역 맞춤형 활용 전략 고도화, 근현대유산의 국가적 브랜드화 등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 정책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연번	지역	문화유산명	지정연월
1	경북 영주시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2018.08
2	전남 목포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2018.08
3	전북 군산시	군산내항역사문화공간	2018.08
4	경북 영덕군	영덕 영해장터거리	2019.11
5	전북 익산시	익산삼거리근대역사문화공간	2019.11
6	경남 통영시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2020.03
7	충남 서천군	서천판교근대역사문화공간	2021.10
8	경남 창원시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2021.11
9	전남 여주시	여수거문도근대역사문화공간	2024.07

3) 문화재청, 2001, 「근대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허가기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금지행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 2. 문제 제기

근현대문화유산은 전체 구성비의 약 60%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연구는 필연적으로 건축사·건축공학·도시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 다수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구조적 특성 분석, 보존기술 적용,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아 왔다<sup>7)</sup>. 이후 연구는 건축물 단위를 넘어 도시재생·경관 관리·산업유산 활용 등으로 확대되며 근현대유산의 도시재생 등 도시적 맥락과 경관적 가치를 조명하기 시작했다<sup>8)</sup>. 나아가 최근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역관광, 주민 참여, 장소 브랜딩, 박물관화 등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sup>9)</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 확장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체계에 내재된 지리학적 관점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한계가 발견된다. 특히 근대역사문화거리(선), 근대역사문화공간(면)의 등록체계 자체가 지리학의 기본 요소를 기반으로 채택되었으며, 점 단위 개별 건조물의 물리적 보존을 넘어 '공간 단위의 유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정책 담론과 실무에서는 점·선·면, 공간, 장소 등 지리학의 핵심 개념들이 개념적 엄밀성 없이 차용되거나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공간의 구조적 특성, 장소의 사회적 생산, 경관의 층위성 등 지리학이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이 충분히 적용되지 못한 채 행정적·기술적 차원의 활용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학문적 접근으로 확장해보려고 한다.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가 제시한 **장소상실(placelessness)**의 개념은 특정 장소가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상실하여 고유한 분위기와 의미가 희석되는 현상을 지칭한다<sup>10)</sup>. 근현대문화유산의 상당수는 근대 산업·도시구조 속에서 형성되었으나, 산업 구조 전환·도시 쇠퇴·기술혁신 등으로 인해 사용 기능을 상실하면서 장소적 의미가 단절되는 장소상실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즉 원래의 사회적 기능·일상성·물리적 맥락이 붕괴되면서, 근현대유산은 '남겨진 장소', '기능을 상실한 장소', '개발의 대상' 정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동시에, 최근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연계 보수·정비, 경관 개선 사업,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은 이러한 장소상실의 공간에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등록유산이 전통적 지정유산보다 규제 강도가 낮고, 건폐율·용적률 특례 등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현

7) 김동직, 200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 문화재 지정 근대건축물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이혜민, 2003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현황에 관한 연구 :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대화, 2009, 「근대기 화가의 주거건축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8) 나은정, 2014, 「광주광역시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지현, 2008 「산업유산의 활용을 통한 도시문화경관 형성에 관한 연구 : 인천항 경관요소 적용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9) 이동훈, 2024,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방안 : 대전 소재 동 철도관사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수진, 2013, 「한국 근대건축문화재의 박물관 활용과 대안 모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안선희, 2025, 「군산 근대문화유산 형성과정과 지역성 구축 고찰 : 방문자의 유산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전문대학원 국제문화유산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10) 에드워드 렐프, 1984, 「장소와 장소상실(Place and Placelessness)」.

대유산은 적극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기능·경관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보존을 넘어, 근대시기 장소성의 형성 → 현대의 장소상실 → 새로운 장소성의 재구축이라는 삼중 구조적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근현대문화유산, 특히 선·면 단위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기능적 쇠퇴와 장소상실을 지나, 관광자원화·지역 브랜드화·지방소멸 대응 등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장소성의 소멸과 재생산, 공간의 사회적 구성, 경관 변동의 동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고 생각한다.